

이덕일의 '역사의 창'



8대 역사문화권 유감

전국을 8대 역사문화권으로 나눠 국고를 지원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국정 100대 과제...

이다. 이런 취지에 맞춰 문화재청에서 전라북도 남원을 야마토왜의 식민지인 '기문국'으로, 경남 합천을 이른바...

마한 역사문화권은 당초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일대'라고 규정했다가 슬그머니 '충청·광주·전남·전북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경우 백제사와 충돌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백제 역사문화권'을 '서울·경가·충청·전북 지역'으로 명기해서 전남 지역은 백제 강역이 아닌 것으로 삭제시켰다.

왕이 직접 정벌하려고 무진주(광주)까지 내려가자 탐라가 죄를 빌어서 그만두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광주 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백제 강역인데, 백제 강역에서 전남을 슬그머니 빼놓는 한편 마한을 집어 넣은 것이다.

'삼국사기'는 백제 온조왕 27년(서기 9년) 마한이 멸망했다고 말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3세기까지 마한이 존재했다고 우긴다.

필자는 새 정권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 역사 문제 하나만 바로잡으면 성공한 정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역사 분야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은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식민사학자들이 제 세상을 만나서 날뛰었던 시기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내실 있는 광주의료원 설계와 공공의료 정상화



김종선 광산구 의사회장 첨단우리병원 원장

약계층 치료 등 이타적인 진료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모든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광주의료원은 필수 의료가 중심이 된, 기능별 센터 중심의 병원이 되어야 한다. 척추 및 관절 센터, 통증클리닉 등 기존 민간 병원의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공공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셋째, 광주의료원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광주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병원이다.

의료원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적자는 결국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광주광역시 건강보험공단에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절한 수가를 요구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 예산을 확보하여 광주의료원 운영에 광주시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주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광주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광주보훈병원은 의사들의 대거 퇴직으로 현재 존립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광주보훈병원 의사들은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싸워 왔고, 자긍심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다.

광주의료원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광주의료원이 설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월 22일 '광주의료원 성공 개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첫째, 광주의료원은 시장성에 어긋나더라도 수익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타적이고 공익적인 진료에 중점을 두어, 민간 병원과 진료 범주가 겹치지 않는 병원이어야 한다.

기고

디지털 시대, 슬기로운 신중년 생활



김백수 광주복지연구원 사무처장

못해 빈 손으로 집에 돌아온 60대 어머니가 딸 앞에서 낭패와 절망감으로 '엄마는 이제 끝났다'며 울었다는 트위터 사연이 수만 회 넘게 공유되며 화제가 됐을까.

이제 이러한 디지털 소외를 줄이려는 노력을 개인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지자체와 유관 기관, 지역 협회체, 그리고 민간 시설까지 스마트 생활 가이드를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질의 스마트 생활 교육은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노년층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사회문제 해결사 역할도 톡톡히 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제시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중년의 경력 설계 방향은 플랫폼 활용에 맞춰져 있다. 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진보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신중년의 플랫폼 활용 방향으로는 재능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전문 프리랜서가 제시됐다. 디자인·IT 개발·번역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디지털 노마드'형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는 이미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직접 고용보다는 분야별 전문가 등록된 플랫폼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이 늘어나므로, 신중년이 전문 분야 재능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문명 앞에 좌아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고,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따라잡기만 젊은 세대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인 만큼 신중년에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활이 점점 불편해진다.

직장인들은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빚어진 '좁 피곤증'을 새로운 스트레스로 호소한다. 화상회의 통신망인 줌(Zoom) 회의가 잦아 긴장을 늦추기 어렵고,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을 장시간 보는 듯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한다.

여기에 장·노년층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 젊은 사람들도 때론 힘들게 느껴진다는 '키오스크(kiosk·무인 정보 단말기) 스트레스'다. 인건비를 줄이고 갑질 고객을 방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몇몇 키오스크는 직원 이 도와줘야만 알 수 있는 불편한 시스템 때문에 원래 목적이었던 효율성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햄버거를 사러 갔다가 키오스크를 다루지

社說

지배종 된 '스텔스 오미크론' 2차 유행 막아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광주 지역을 뒤덮고 있다. 오미크론보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재감염 위험도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사실상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치 2차 대유행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제 광주 지역 신규 확진자는 1만 2301명을 기록했다. 이달 중순 1만 5000명대까지 치솟았던 하루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26일부터 나흘 연속 1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9일부터 다시 1만 명대에 진입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일단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광주 지역에서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1주차에는 0.9%에 불과했지만 3월 1주차는 34.4%, 3월 3주차 50.0%, 3월 4주차에는 76.7%를 기록했다.

데이터센터 해남 유치 국정 과제 반영을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가 있는 해남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의 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가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열 개 유치를 목표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기본 구상안까지 마련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 시설인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그린 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국내 최대 발전 용량(98MW)과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ESS, 306MW)를 갖춘 해남 솔라시도가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률이 50%를 넘기면 우세종, 90% 이상이면 지배종으로 불리는데, 현재 속도라면 광주는 이미 9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양상에 따라 2차 대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델타-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정점을 찍고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는데도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 등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를 감안하면 방역 완화를 서두를 일이다.

센터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재생에너지 최대 생산지인 해남에 전력 소비량이 많은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타당한 일이다.

해남 솔라시도는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로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도 선정돼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더구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남 지역 핵심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해남 지역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해남 유치가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쩌다가 광주는 온통 고층 아파트로 뒤덮인 도시가 됐다. 서울의 아파트는 저체하어 평범한 직장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초고가 주거 공간이 돼 버렸다.

도시를 오로지 부동산 시장으로 보고, 주택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급 중심의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하며, 민간에 내맡긴 결과가 지금의 이 모습이다.

도시계획의 실패

자연녹지나 산업단지, 저층 주거지 등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용도가 바뀌면서 10만 원 안팎이었던 땅값은 순식간에 100만 원 넘게 된다.

아파트 개발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도하는데 시행사는 이러한 '토지 작업'을, 시공사는 '건축'을 맡는다. 시행사는 용도 변경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시공사는 아무런 검토 없이 분양가를 계속 올리면서도 한 번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제도를 만들어 그 이익을 환수하고, 분양가 공개와 건축 원가 조사를 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미 한몫 단단히 챙긴 투기꾼들이 광주를 비롯해 전국 도시를 돌고, 여기에 지역 자생 투기 세력들까지 합세해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았음에도 수수방관했다.

지역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이 부족한 서울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일률적인 정책 탓에 인구도, 경제성도 너무 다른 지방 도시 광주에 고층 아파트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실패한 것이다. 도시들이 각각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공원, 광장, 보행로 등을 확보하고, 지역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며, 행정 행위로 상승한 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책이 보인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publication detail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